

사드 (THAAD) 7문 7답

사드 배치 반대!
한반도 비핵화!

 **사회진보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론

사드, 어떻게 볼 것인가 03

사드에 대해 7가지 궁금한 점

1. 사드는 방어를 위한 무기인가? 06

[더 알아보기: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과 사드] 10

2. 중국, 러시아는 왜 반발할까? 12

3.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이 대안이 될 수 있나? 16

4. 북한의 핵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19

[더 알아보기: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경쟁] 22

5. 사드반대는 성주 주민만의 문제인가? 25

6. 사드 배치는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인가? 28

7.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1

[더 알아보기: 사드반대운동에 연대하기] 34



서론

사드,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과 미국 정부가 기어이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최종단계 고고도 미사일방어)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2014년부터 배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사드는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와 아무런 논의도 되고 있지 않다며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외면하다가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이 진행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를 공식화했습니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 즉 최종단계에서 요격하기 위해 설계된 무기입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드가 방어용 무기라는 그들의 말은 진실일까요? (질문1) 또한 북핵을 막는다는 사드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요?(질문2) 한편으로, 사드를 배치하게 된 원인이라고 지적되는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질문4)



▲ 출처: 한겨레

본 소책자는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수도권 방어의 대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망(KAMD)의 문제점(질문3)을 살펴보고 비민주적인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해 ‘군사 문제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이어야 하나’라는 시각에서 접근해봅니다.(질문6) 이를 통해 한반

도 평화를 해치는 사드에 대해 어떻게 행동해나가야 할지 약간의 제언을 담았습니다. 특히 사드만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미국, 중국 등 모든 핵무기가 철폐되어야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질문7)

이 소책자를 통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사드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많은 관심과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8일

사회진보연대



사드는 방어를 위한 무기인가?

한국과 미국 정부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라고 선전합니다. 물론 무기 자체의 논리는 방어용이지만, 사드가 포함된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은 결코 방어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선제 핵 공격을 뒷받침하는 무기체계입니다.

사드는 보통의 미사일처럼 화약을 실은 폭발형 탄두가 아닌 충돌과괴체(kill vehicle)를 이용해 비행 중인 적국의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이는 핵폭발을 막으려는 의도에 따른 것인데, 핵미사일은 충돌이 발생하면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화학, 세균 탄두의 경우 사드가 맞추더라도 여전히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드는 오로지 핵무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지상기반 미사일방어 체제(GMD)에서 사용되는 총돌파괴체 (kill vehicle)

출처: 위키피디아

하지만 완벽한(핵)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해 평화를 달성하겠다는 논리는 위험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첫째, 완벽한 방어체계 개발은 선제공격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항상 공격적 핵무기 정책과 쌍을 이룹니다. 현재 미국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는 북한을 비롯한 적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공격적인 핵무기와 함께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추게 되면, 세계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 미국의 동아시아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상은 한국일본대만으로 이어지는 범지역적 네트워크로서, 동아시아 동맹국의 군사화를 강력하게 추동합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동아시아 미사일방어 시스템 구축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군비증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셋째,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항구적인 신무기 개발, 도입을 촉진합니다. 즉 주변국은 방어망을 무너뜨리기 위한 신무기를 개발해야 된다는 강력한 압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대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넷째, 미사일방어 시스템은 기술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미국의 우려하는과학자연합(UCS)을 포함한 여러 과학기술자 집단들은 여러 차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미사일방어망을 만들어도 돌파해낼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수월하다는 분석을 낸 바 있습니다. 1)설사 방어체계가 90%의 방어능력이 있다고 해도 나머지 10%의

1) 요격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열이 발생하는 부유풍선으로 레이더를 교란시킵니다.(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부유풍선의 속도는 핵탄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격미사일이 핵탄두를 구별해내기 어렵습니다.)

둘째, 하나의 탄두에 여러 개의 작은 탄두를 탑재합니다. 가짜 탄두(기만탄, decoy)도 포함됩니다.

우려하는과학자연합(UCS), <Missile Defense Countermeasure>, 2000.

미사일도 충분히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사일방어망이 완전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민중들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한 미사일 방어라는 구상은 파괴적인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100% 막을 수 있다’는 실현 불가능한 환상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대중들이 핵전쟁의 파괴력을 간과하게 만들뿐더러 군부의 관료들은 더욱 공세적인 (핵)전쟁 준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만듭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NSR7dXHdCY>

더 알아보기: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과 사드

미국의 미사일방어 계획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 구상(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에서 출발합니다. 이 당시는 소련의 핵공격을 가장 큰 염두에 두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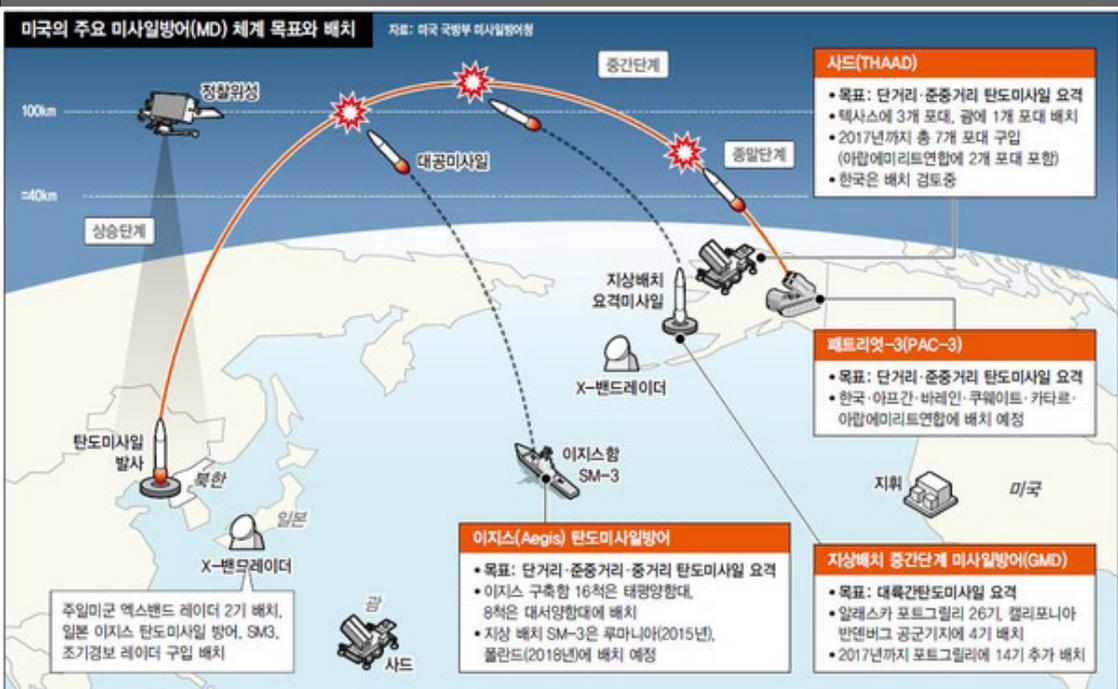
소련 붕괴 후 1991년 H. 부시는 전략방위구상을 대폭 수정하여 ‘제한공격에 대한 세계방어(GPALS: Global Protection Against Limited Strikes)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한공격이라는 표현대로, 소련 같은 대국보다는 핵무장 가능성이 있는 이란, 북한 등 지역강국으로부터의 미사일공격 대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들 나라는 미국 본토까지 미사일을 보내는 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미국 본토보다는 전쟁지역(theater, 전역(戰域))의 미사일방어가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역은 대체로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GPALS는 1993년에 국가미사일방어(NMD, 본토 방어용)와 전역 미사일방어(TMD, 해외미군과 동맹국 방어용)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사드의 개발이 시작된 것도 이 때부터입니다. 1999년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 구조를 위한 선택>에서 한반도에 사드 4개 포대와 패트리엇 7개 포대를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에는 사드 4개 포대와 3대

의 레이더, 대만에는 레이더 1대 이상 배치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9년에 이미 한국일본대만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 구상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셈입니다.

미사일방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핵무기를 막는커녕 오히려 핵전쟁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핵무기는 한 발만 맞아도 괴멸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핵무장을 한 국가끼리는 보복공격이 두려워 선제공격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미국의 구상에 따르면 상대방의 핵무기를 미사일방어로 막을 수 있다면 보복공격의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의 완성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사일방어 계획이 '방어'라는 이름과 달리 공격을 위한 무기체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출처: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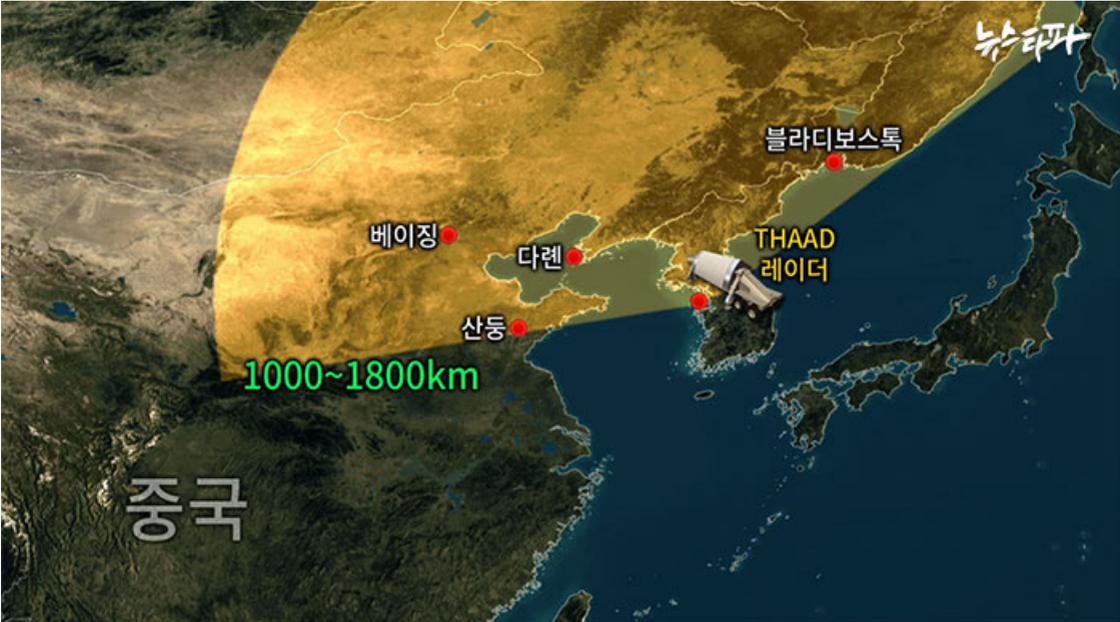


중국, 러시아는 왜 반발할까?

사드배치 발표 직후,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한국 사드 배치하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2일 ‘한국 언론의 8가지 사드 기담 괴론(기이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황당한 이야기)을 감상하시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놓았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왜 이렇게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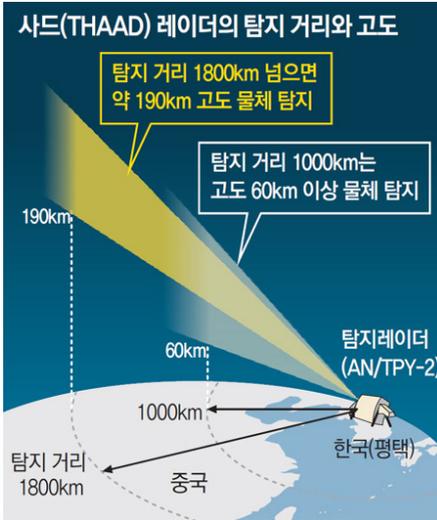
중국은 미군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더라도) 사드의 AN/TPY-2 레이더를 전진배치 모드로 설정하여 탐지 거리를 큰 폭으로 확대하면, 중국 영토를 감시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미 육군 기술자료에 따르면 전진배치 모드는 탐지거리 1,800km, 탐지각 120도이며, 종말단계 모드는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입니다. 모드 전환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8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중국의 우려

는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전진모드로 배치된 사드레이더가 중국 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모드일 시 예상되는 탐지범위
출처: 뉴스타파

물론 한미 양국은 사드 레이더가 전진배치 모드로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하는 것이 주목표는 아닐 듯합니다. 전진배치 모드의 경우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을 제대로 탐지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 보수언론에서는 사드레이더의 고도 때문에 중국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높은 고도만으로도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기 역할은 충분하다.

출처: 동아일보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사드를 필두로 한 동아시아 미사일방어망의 완성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중, 러와 미국이 핵미사일을 들이대며 대치하는 가운데, 미국만 '핵미사일을 탐지·요격할 수 있는 치사한 방법'을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드배치는 한미 정부의 공색한 변명과는 달리 미국과 중국의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따라서 동아시아의 전쟁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중러 간 통합미사일방어망 구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

아의 군사전문가 블라디미르 예브세예프 독립국가연합 연구소 부소장은 “외교적 수단만으론 부족하며 군사정치적 대응만이 미국의 MD 구축 계획을 저지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이대로는 미국대 중러 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평화는 무기로 지킬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질문

03

한국형미사일방어 (KAMD)가 대안이 될 수 있나요?

사드배치가 경북 성주로 결정되면서 정작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평택 등 경기남부를 제외한 수도권이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인 200km 바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그 대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를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 킬 체인(Kill-Chain)과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는 한국의 독자적인 구상은 아닙니다. 2012년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유사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억제수단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했습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에서 한국군이 담당하는 것이 바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입니다. 따라서 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을 위한 사전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미 양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간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동의 하였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는 미군의 데이터 교환 네트워크 ‘링 크-16’과 연동하여, 양국의 실시간 미사일방어 정보공유 체계를 연 내에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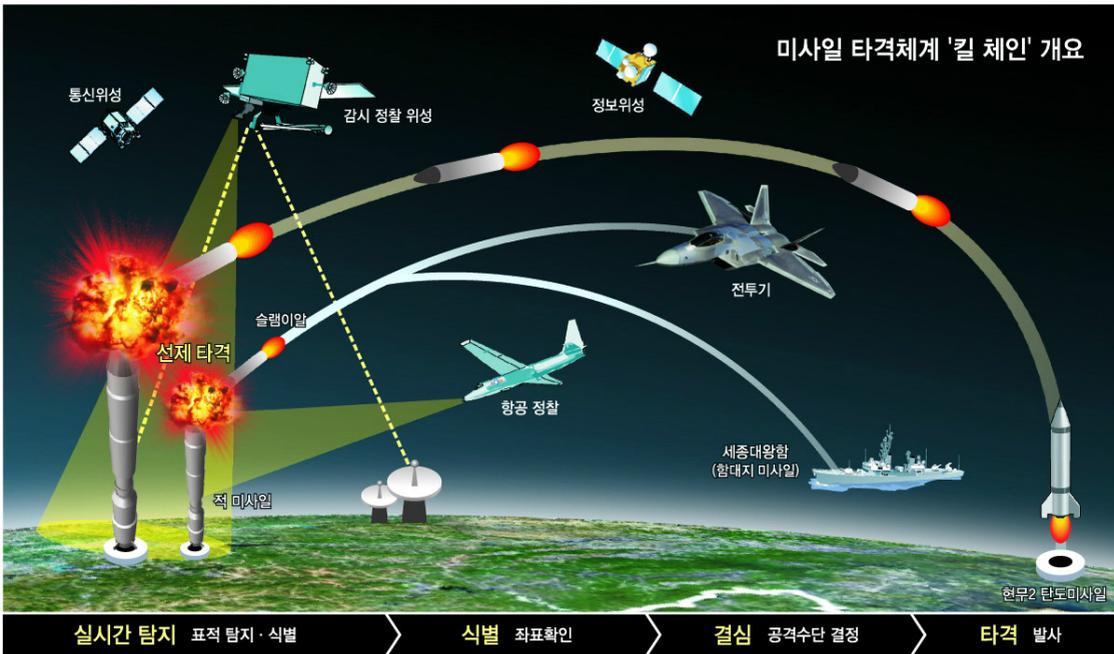


◀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출처: 세계일보

한편 국민의당은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그 대안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주장합니다. 사드도입은 미국·중국·북한의 전략적인 이익만 보장하고, 주변국 긴장을 높인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만을 겨냥한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한미일 군사동맹의 우위를 한반도에서 입증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사드는 안 되고,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은 가능하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 성립

될 수 없으며, 무기체계 도입과 무한군비 경쟁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사드 도입과 동시에 더 촘촘한 미사일방어망으로 한국 전역을 뒤덮겠다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제 타격으로 상대방을 제압한다는 호전적인 킬 체인과 신무기·현대화 전략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는 지속적인 군비경쟁과 무기개발 유희를 정당화시킬 뿐입니다. 대화보다는 대결, 군축보다는 무기를 앞세우면 긴장이 커질 뿐, 평화가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 킬체인(Kill Chain)의 개요. 출처: 세계일보

그래픽 = 윤대영 기자 daeng9@segye.com



북한의 핵에는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사드에 대한 우려, 반대가 나올 때마다 한국 정부와 언론은 ‘북핵 현실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당장 북한 핵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는 마당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대로 북한 핵무장은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북한은 2013년 헌법 개정을 통해 핵무장 국가임을 선언했고, 최근에는 남한 전체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실험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는 없습니다. 운동 진영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무기로 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협상용, 또는 방어용이라 주장합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이 엄연하게 존재하는 가운데,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대로 미국의 핵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는 북한, 중국의 핵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무기라고 말입니다.

핵무기에 핵무기로 맞서는 것은 평화가 아니며, 핵전쟁만을 불러옵니다. 모두들 처음에는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상대방은 이 때문에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출구가 보이지 않는 군비경쟁을 낳을 뿐입니다. 과거 미소 냉전의 역사가, 그리고 현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북한의 핵무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의 중요한 구실이 되어왔고 이는 다시 북한의 핵무장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핵에 대한 대안이 사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된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를 교환하려했던 6자회담의 붕괴가 일차적 요인입니다. 그 뒤에는 몇 십년 간 지속된 한미 양국에 의한 군사적, 외교적 압박이 배경에 있습니다. 보수언론들의 주장처럼 사드 같은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기는 넘쳐나지만 대화와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이 강화된 것입니다. 강압적인 정책과 사드 배치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완벽할 수 없는’ 완벽한 방어망을 만들기 위한 군비 증강의 도미노가 아닙니다. 진정한 해답은 대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과 그 조건이 되는 군비 축소, 특히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절멸적 무기인 핵 군축에 있습니다. 또한 이를 요구하는 평화운동이 해답일 것입니다.



더 알아보기: 미국과 중국의 핵무기경쟁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가입니다. 양국의 핵탄두 숫자는 전 세계의 93%에 달하는 1만 5000여기입니다. (미국 7200, 러시아 7500) 1991년부터 미국과 러시아는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를 맺어 핵탄두의 숫자를 줄여왔습니다. 2021년까지 각자 1,550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 들어 핵감축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바마 취임 이후 미국은 702기의 핵탄두를 해체했는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전임 정부 대비 13%를 감축했는데, 이 역시 냉전 이후 어느 정부와 비교해 봐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H.부시 41%, 클린턴 22%, W.부시 50%)¹⁾

한편으로 미국은 여전히 공격적 핵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 발간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 등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을 명시했습니다. 2013년 발간한 ‘핵무기 사용 정책에 관한 새로운 지침’은 “기술적, 지정학적 위협에 강건한 대비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지침’은 미국은 잠재적 적국에 대항하는 ‘선제 응징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제 응징 능력은 미국 전략사령부의 표현에 따르면 ‘예방적’ 또

1) 미국 과학자협회(FAS), <US Nuclear Stockpile Numbers Published Enroute To Hiroshima>, 2016-05-26.
<https://fas.org/blogs/security/2016/05/hiroshima-stockpile/>

는 ‘공격적으로 반응적’입니다. 이는 핵미사일 발사 시도만 포착되어도 발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 핵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점차 공격적인 면모를 갖춰가는 미국의 핵무기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이 미사일방어망 구축과 군사동맹 강화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미사일방어 연구·개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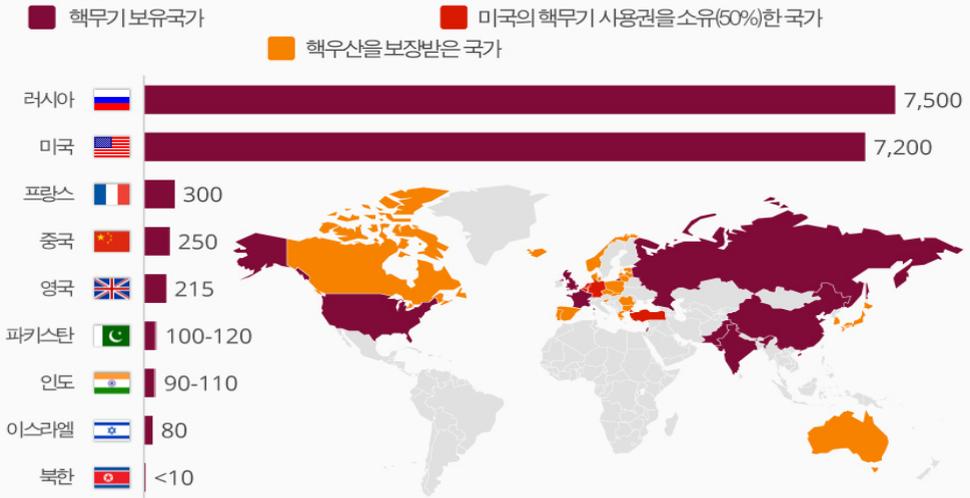
중국도 핵무기정책을 공격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맞서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선제 핵공격 불가’를 고수하며 필요 이상의 핵탄두와 핵무기 능력 개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중국은 250기 가량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데, 모두 미사일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선제공격 및 신속한 보복공격이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핵공격을 탐지할 조기경보시스템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 중국의 군사과학연구원은 “적의 핵탄두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재빠르게 보복공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적인 핵무기정책의 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5년에는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핵탄두 또는 가짜 핵

탄두를 실어 미사일방어망의 요격미사일을 속이는 MIRV(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 기술을 실용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2)

중국의 핵정책 역시 북한의 핵무장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핵전쟁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민중의 입장에서는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정책이야말로 중국 핵전력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국가별 핵탄두 보유량(2015년 기준)



▲ 출처: 핵무기 폐지를 위한 국제 캠페인(ICAN)

2) 우려하는과학자연합(UCS), <China's Military Calls for Putting Its Nuclear Forces on Alert>, 2016-01.
<http://www.ucs.org/h-clear-weaponry-us-china-relations/china-hat-tiger>



사드반대는 성주 주민만의 문제인가?

정부는 그동안 사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고, 협의도 없었으며, 결정된 바도 없다”는 3무원칙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다 일사천리로 사드배치와 성주 지역 결정을 발표한 것입니다. 어떠한 논의도 합의도 없었기에 성주 주민들의 반발은 당연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보수언론은 지역이기주의를 뜻하는 님비(NIMBY)로 폄하하고 있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도 ‘님비’라는 표현을 통해, ‘성주’ 주민들이 국가적인 문제를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주 주민들은 정부의 불통·독선적인 결정에 분노하고, 군사적 긴장고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님비라는 것은 혐오시설을 막는 걸 말하는데, 사드는 우리 목숨, 생존권 문제다. 이걸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 이를 의식하여 한민구 국방부장은 “사드반대를 넘비현상이 라고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성주주민 달래기에 나섰다. 넘비로 몰아붙이다가 여의치 않자 말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더욱이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를 방문했을 당시 큰 항의에 막혀 돌아가자, 정부와 보수언론은 ‘외부세력’을 거론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주 주민들을 ‘외부세력 선동에 휘둘리는 우매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에게 외부세력은 다른 지역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땅을 망치는 사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자들이 외부세력입니다. 사드 도입 반대 국민을 이간질 시키는 권력과 언론, 거기에 기생하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외부세력입니다.”

▼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방문하자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는 성주주민들.

출처: 오마이뉴스



고 반박했습니다. 사드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도대체 누가 외부세력이란 말입니까.

 남비현상과 외부세력 프레임으로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한 정부의 시도는 실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드배치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드 반대 여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드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드배치를 철회하는 것이 더 큰 상처와 갈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키고 목숨과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드배치, 한국 어디에도 사드배치 최적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인가?

과거 사드관련 논의가 터져 나올 때에도 정부·새누리당, 보수 언론은 ‘고도의 전문적 군사 지식’, ‘사드 정치공론화 반대’, ‘국회가 아닌 행정부의 정책 사안’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제4조에 따른 이행행위로, 국회 동의를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때로는 절차 뛰어넘는 사안이 국방의 문제”라며 정부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수언론들은 ‘사드괴담’이니 ‘남남 갈등, 국론 분열’을 거론하며 한미 양국 관료들의 합의로 사드 논의는 끝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와중에도 “사드 배치 말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보라”며 호통을 쳤습니다. 갖가지 변명을 가져다 붙이며, 정부의 말을 따르라고 겁박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사드와 같은 군사문제는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거나,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적 결정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한국 내 모든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무엇보다 생명과 직결되는 전쟁 위협은 전문가나 정부관료의 판단으로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전 국민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반(反)민주적 결정과 민심외면으로 사드배치 반대여론과 저항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도의 군사지식·국방(안보)의 문제임을 강조하는 의도는 일반 국민을 향해 사드 문제에 조금이라도 끼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발상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관념은 행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 집단의 정치 독점을 합리화하는 정치적 반동화·정치의 후퇴일 뿐입니다.

더욱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배치권리/허여)는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합니다. 한국 내 모든 시민

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임에도 미국의 군사적 요청과 결정에 대해 어떠한 거부도 반대도 할 수 없는 것이 상호방위조약 4조의 내용입니다.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국무총리가 진정으로 성 주 주민들과 반대여론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고, 전문가들만이 결정한 사드 배치는 절차도 소통도 정당성도 부재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처럼 사드배치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한미 양국은 온갖 구실을 들어가며 사드 배치를 강행하려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관료들의 결정에 내맡기겠습니까? ‘북핵’ 위협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엇이든 마음대로 밀어붙이는 정부와 동아시아에서 유사 시 핵전쟁을 준비하는 미국에 맞서 민주주의와 생명, 평화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성주 주민을 고립시키지 마라! 한국 어디에도 사드는 안 된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사드를 성주 지역만의 문제로 고립시키려고 합니다. 사드 반대 시위에 ‘외부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는 선동부터, 사드 문제를 전자파 유해성만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사드 괴

담’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주 주민들은 사드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주 주민들과 연대하고, 지지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모든 핵무기에 반대한다! 한반도를 비핵화하라!

사드가 들어오게 된 연원인 한반도 핵무기 경쟁에 대해서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모든 핵무기를 반드시 폐기해야 합니다. 무기를 통한 대응은 또 다른 핵무기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냉전시절, 유럽의 평화군축운동의 교훈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럽 공산당들은 미국 핵무기에는 반대하면서도 소련 핵무장에는 침묵했습니다. 소련의 핵무장을 미 제국주의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방어하기 위한 '자위적', 필요불가결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핵 군비경쟁 감축이라는 평화운동의 원칙과 대의를 훼손했고, 대중적인 신뢰도 잃게 되었습니다.

반면 핵무기군축운동(CND)을 중심으로 한 평화운동은 유럽, 미국의 일방적 군비축소를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괜찮고, 상

대방의 무기는 나쁘다’는 태도로 핵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미사일을 막기 위험이라지만, 사드는 북한의 더 강한 반발과 더 강력한 핵무장의 빌미가 될 것입니다. 공포와 전쟁 위협을 오히려 키우는 것이지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모든 핵무장을 반대하고, 군비증강과 호전성을 더해가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여나갑시다.

▼ 출처: 더팩트



사회진보연대

사회진보연대는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일구어 나가기 위해 사회운동의 사상 이념의 재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와 군사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민중적 대안의 모색, 노동자운동과 여성운동의 혁신을 주요한 가치로 1998년 출범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는 사회운동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이론 정책연구, 교육사업,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